

극정제 적행법

가이드라인
2.0

법제처와 함께 국민에게 감동을!!



법제처



적극 행법제

가이드라인
2.0

법제처와 함께 국민에게 감동을!!



법제처



오적극 주무관의
적극행정
법제 따라하기

“적극행정은 우리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같은 업무를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무관님은 해내실 줄 알았어요.”



“오호 ~~~ 또 한 건 하셨습니다.”



“에이~ 뭘요. 그래도 제안한 법령이 정비되어서 정말 다행이죠. 이럴 때 적극행정을 실천한 보람이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적극행정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돼요. 이게 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덕분이죠. 가이드라인을 수시로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동료들의 칭찬에 머쓱해진 나바른 주무관이 손사래를 치며 작은 책자를 흔들어 보인다.



“그 책은 뭐고, 적극행정과 적극행정 법제는 또 뭐예요? 선배님, 저도 좀 알려주세요.”

나바른 주무관 옆에 있던 오적극 주무관이 머리를 긁적이며 어깨 너머로 책자를 유심히 쳐다본다.



“아, 오 주무관은 이제 새내기라서 잘 모르겠구나. 적극행정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줘야겠는걸. 우리 같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적극행정이라고 해. 그리고 적극행정 법제는 법령을 만들거나 해석하는 것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럼, 저희들이 국민의 삶의 현장 곳곳을 살펴보면서 법령이 없거나 잘못되어 있어 국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부분들을 해결해나간다는 거죠?”

나바른 주무관의 친절한 설명에 오적극 주무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그렇지.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적극행정 법제를 통해 적극행정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이거든. 이 책은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알아야 할 법령을 입안하거나 해석할 때 참고하도록 안내해주는 실용 지침서야. 거기에는 적극행정 법제 사례들도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아, 그럼 제가 현장에 나가서 불합리하거나 고쳐야 하는 것이 있다고 느꼈을 때 이 책을 통해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우와~~ 정말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적극 주무관은 적극행정과 적극행정 법제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공무원이 적성에 맞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이 많았던 오적극 주무관. 적극행정 법제를 잘 실천하기만 해도 누구보다 훌륭한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니 앞으로의 공무원 생활에 활력과 자신감이 생긴다.



“저의 적극행정으로 국민 삶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보람이 아주 클 것 같아요. 앞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이봐, 오 주무관. 지금 어딜 가려고? 점심은 먹고 가야지.”



“아닙니다.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실행해야죠. 지금부터 적극행정을 실천하러 가보겠습니다.”

오적극 주무관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선배들을 향해 당찬 웃음을 지어보였다.



1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의미합니다.

2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극행정 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기본법」 입법예고안



제13조(적극행정)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 수행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법률적 근거를 통해 적극행정이 법률상 의무임을 선언하고 행정의 전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 적극행정 법제란?

적극행정 법제란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 법제행정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으로, 법령을 입안할 때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기준을 적용하고,

법률의 제정·개정 없이 하위법령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합니다.

또한, 기존 법령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공공의 이익과 어긋난다면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여 적극행정의 입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공공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의 취지에서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적극행정 법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법령정비안을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4 적극행정 법제가 필요한 이유

법률의 제정·개정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반면, 사회환경 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져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는 법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성장 동력이 위축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됩니다.

또한, 예산 지원이나 행정조치로 가능한데도 법률에 근거를 두려고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사항까지 법률에 세세하게 규정하여 법률의 복잡화와 행정의 경직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나 징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폐단을 고치고 법령이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도록 적극행정 법제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5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이란?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은 공무원 누구나 자신의 업무에서 법령을 입안·정비하거나 해석할 때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실용지침서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적극행정 법제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법제행정 단계마다 사례 중심으로 적극행정 법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공무원이 적극행정 법제를 수행하다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법령 의견제시, 정부유권해석, 자치법규 의견제시, 법령입안지원 등 법제처의 종합적인 적극행정 법제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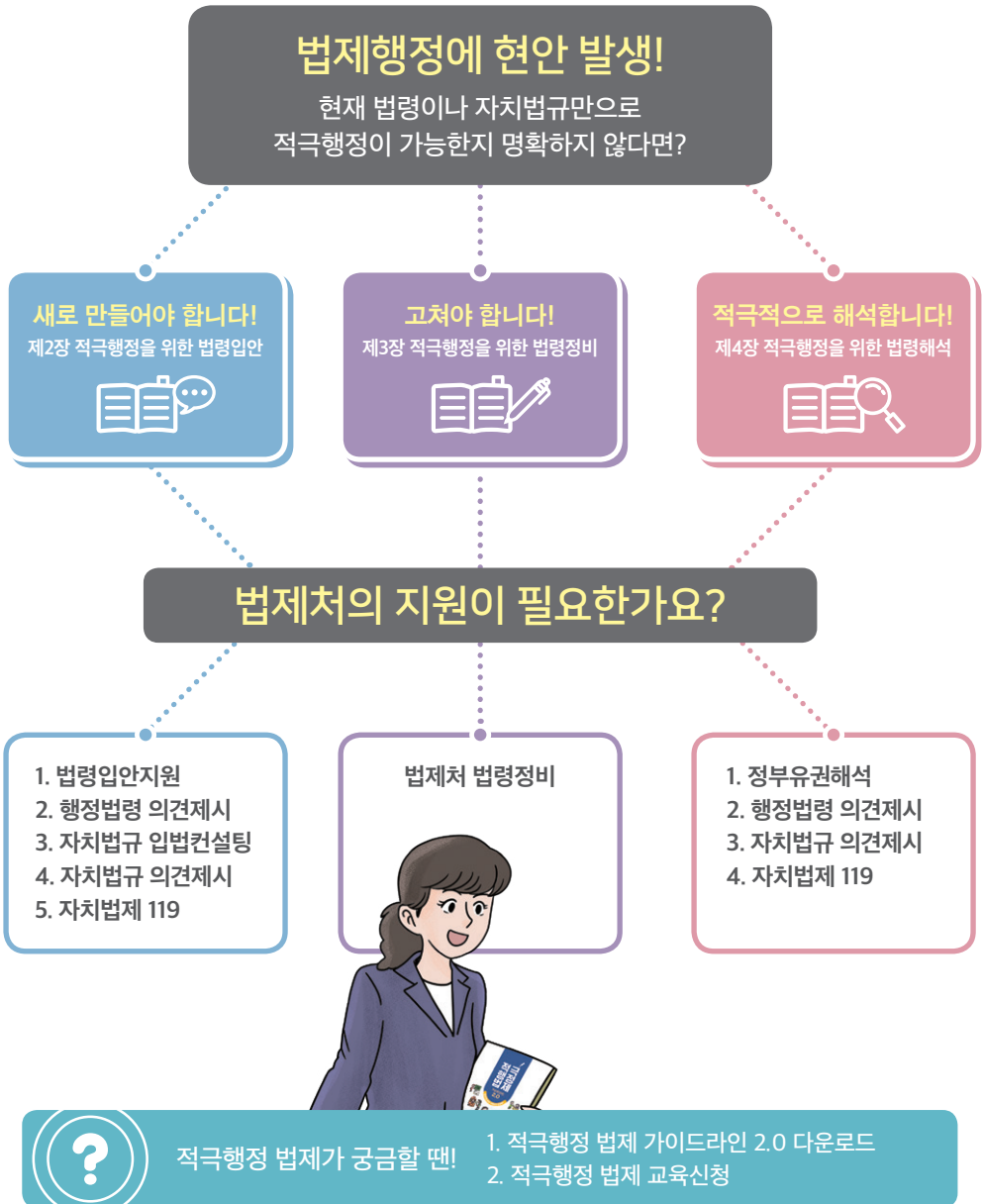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적극행정 법제) ④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 입안의 기준과 제3항에 따른 법령 해석의 원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해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법제 지원)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에 관하여 자문이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6 적극행정 법제, 이럴 땐 이렇게!



※ 부록2 적극행정을 위한 법제처 활용법(p.86) 참고

7 이야기로 보는 적극적인 법령입안·정비·해석

한 스타트업 기업은 어디서나 편하게 수제맥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효모 캡슐 하나만 넣으면 인공지능(AI)이 최적의 온도로 발효시켜 다양한 종류로 나만의 맥주를 만드는 수제맥주 키트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키트는 세계가전박람회에서도 혁신상을 받을 정도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기업은 키트를 소매점에 판매하고 소매점에서 직접 수제맥주를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원을 투자해 공장도 마련했습니다.

기존 「주세법」에 따르면 알코올 또는 알코올이 포함된 술만이 주류(酒類)입니다. 이에 따르면 수제맥주키트는 알코올을 만드는 효모만 들어있을 뿐, 알코올이 없으므로 주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매점에서 키트를 이용하여 만든 수제맥주가 주류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매점이 「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발급받고 주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주류제조자가 됩니다. 소매점은 이러한 부담을 안고 키트를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수제맥주키트 판매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국내 영업을 포기하고 수십억원의 공장도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때, 소관 부처는 법령이 불명확하지만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법령해석을 통해 기업에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하고 소매점은 주류제조면허를 면제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적극적인 법령해석

또한, 향후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나 기술 발전 등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형태의 주류 제조방법을 사업화하는 데 「주세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류의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입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적극적인 법령입안·정비

*「주세법」 제3조제1호다목을 신설하여 주류의 범위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서 해당 기업의 제품이 주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안·정비하였습니다.